



# 인천항운노조 항만인력공급개편 노사정 합의안 합의

## 대의원대회 세부협상을 위한 협상단 선출 등 완료

인천항운노동조합이 최근 10개안으로 구성된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 세부협상을 위한 노사정 합의서(안)'에 합의함에 따라 인천항 상용화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항운노동조합은 지난 9월1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지난 9월4일 해양부와 잠정합의한 세부협상을 위한 노사정 합의서(안)에 대해 대의원 52명 중 46명이 찬성으로 합의하고 세부협상을 위한 협상단도 선출을 완료했다.

협상단은 대의원투표를 통해 결정됐으며 집행부에서 이해우 부위원장과 최두영 쟁의부장이 당연직으로 선출됐고 조문환·김세룡 등 연락소장 2명, 박병렬·김윤환 연락원 2명, 정명호·최영태 조합원 2명 등 직급별 8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인천항운노조가 대의원 대회를 열어 동의한 합의서(안)에는 지난 8월25일 해양수산부가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는 부산항과 인천항, 평택항에 내려 보냈던 8개안으로 구성된 합의서(안)에 '인천북항 등 신규 개장되는 부두에 대해 하역업체의 경영안정 및 항운노조원의 고용보호를 위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조항과 '현대화 기금을 활용해 항운노조원의 권익보장, 복리증진 등에 노사정이 최대한 노력한다'는 2개안이 추가됐다.

이미 알려진대로 해양부가 세부협상기준으로 각항만에 내려보냈던 8개안에는 법리상 시행령에 담지 못했던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규정 배제를 비롯해 고용·정년·임금수준 등의 근로조건보

장을 개별고용계약서와 단체협약에 명시, 근로조건 미이행한 하역사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요청 등이 담겨있었다.

여기에 신규부두 작업권과 현대화기금 활용 등에 노력한다는 2개 조항의 추가됨으로써 그동안 항운노조가 상용화 협상과정에서 정부와 사용자 측에 줄곧 요청해왔던 상용화에 따른 작업권 보상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려지게 됐다.

당장 9월부터 시험 가동되는 인천북항 동국제강부두와 10월 가동될 예정인 현대제철부두의 경우 민자부두인데다 항만물류협회에 가입도 돼 있지 않아 정부와 항만물류협회가 8항에 합의해준다고 해도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이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인천항운노조 최정범 위원장은 "앞으로 속속 개장될 예정인 인천북항을 비롯한 인천신항의 작업원은 항운노조의 본연의 권리이며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고용안정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므로 협상과정에서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현재 내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철 및 철재부두에 대한 하역작업을 전면 거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4일 1차 회의를 가졌던 인천항노사정개편위원회는 9월19일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천항운노조가 동의한 '항만노무공급체제개편 세부협상을 위한 노사정 합의서(안)'에 대한 협의했다.